

시론



오 주 섭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공동대표

선거는 1등만 존재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긴 경선과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지나면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선거는 언제나 많은 사람의 꿈과 열망,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희생 위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유난히 냉정하다. 공부나 예술, 체육, 사업 등 거의 모든 세상일이 1등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노력과 성취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오늘의 2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음 선거에 도전한다 해도 1등이 되기란 절대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 내에서 기회를 박탈당해 아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오직 승자만이 조명을 받고, 대부분의 도전은 결과 앞에서 점차 희미해진다.

선거엔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 필요

특히 광주·전남의 선거는 더욱 어렵다. 그동안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내 역학 관계와 함께 민심의 결이 섬세하고 변화의 흐름에 워낙 민감해 누구도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는

늘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 인간관계, 삶의 방향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 선거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한다.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낙선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낙선의 아픔과 함께 일정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공식 선거비용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실감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남겨진 상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를 하려면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당선 이후의 마음
경계해야 할 것은 당선 이후의 마음이다. 어렵게 승리한 일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본전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쉽다. 특히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감당했던 비용과 희생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본전을 생각하는 순간 공공의 가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슴에 찬 배지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배지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비용 회수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때부터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로 흐르기 쉽다. 그런 정치인은 결국 법적인 책임을 지기 마련이다.

책임의 무게 생각할 때 정치의 품격 살아나
정치는 원래 손익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어야 한다.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내어놓는 공적 헌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마음속에는 "얼마를 썼는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자리해야 한다. 권력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정치의 품격도 살아난다.

삶의 길이 보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삶의 길이보다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정신은 오늘 정치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정치 역시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정치인은 결국 '본전'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권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시민의 삶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정치인이 점차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한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정치를 좋게 배운 예는 별로 없다. 깨어있는 시민이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를 바꿔왔다. 투표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권리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집에 도착한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꼭 투표하고, 당선자에게 지역과 시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자.

社說

역대급 사전투표율 기록, 막판 부동산 표심 어디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전남광주 사전투표율이 크게 뛰었다. 전남지역은 38.9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3.5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광주는 27.83%였다. 광역 행정통합과 기초단체장 격 전지가 늘어난 결합한 결과로 본투표율을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정당과 후보자는 사전투표 이후 부동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도 표심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사전투표율이 치솟았다고 하지만 역시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사전투표 직접투표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블랙아웃'에 들어가면서 민심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유권자는 기존 공개된 여론 조사와 후보 토론, 현장 분위기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광주 동구와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신안군, 강진군, 진도군 등을 주요 접전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 대 비(非) 민주당 진영 간 경

쟁 구도가 형성됐고 현직 프리미엄과 정당 지지세, 조직력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예측불허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돼는 것도 1당 독점 지형에 균열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의 약진이 민주당으로선 어지간히 곤혹스럽기만 하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마지막 주말·휴일 유세에서 후보자들은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부동산 흡수에 주력했다. 문제는 고질병인 네거티브 공방이다. 극심한 혼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젠 이틀 남았다. 선거 초반 분위기와 달리 위기감이 커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힘있는 여당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은 민생 관련 이슈를 부각하며 견제와 감시를 위한 대안세력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합교육감 선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곳곳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활을 건 총력전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생활인구 정책에 역량 모아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권 체류인구는 총 86만17천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 외에 일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업무·쇼핑·의료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행안부와 데이터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89곳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추석 황금연휴가 가장 열흘간 이어진 영향으로 10월 체류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상 휴가철인 8월보다도 많은 사람이 고향과 해남군 등 장거리 지역까지 찾았다.

10월 기준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49만7천966명, 체류인구는 45만2천619명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44만5천864명, 38만4천355명, 곡성군은 22만6천826명, 19만9천615명으로 나타났다. 각기 생활인구의 85%를 훌쩍 넘어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당일·단기(2-5일) 방문 형태가 다수였다. 하지만 체류인구가 역시 지역

경제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소비액의 30-40%에 달하면서 동네상권에 파급됐다.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5천원 정도였다.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전남도는 얼마나 자주 오고, 오래 머물며, 실제로 소비하고 활동하는지 등 체류인구 중심으로 정책 시선을 넓혔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민이자 이웃으로 온기가 퍼지도록 힘쓰고 있다.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국민들 상당수가 고향이나 여행지 등 지방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한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400만명의 거대 경제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자치칼럼



김 용 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오는 7월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다시 합쳐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은 제마다 '시민주권 실현'을 외치며 도·시민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시민의회 구성, 숙의 토론 활성화, 온라인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두 행정 구역이 거대하게 통합된 상황에서 만약 풀뿌리 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보들이 외치는 시민주권은 일부 엘리트 활동가나 목소리 큰 소수만이 독점하는 상층부의 거버넌스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주권 담론의 나열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4년 임기 동안 주민자치를 시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성장시킬 구체적인 제도적인 실질화 방안이다.

그동안 주민자치는 지지체 내부의 지엽적인 행정 업무나 형식적인 예산 운영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의 논의 구조 자체를 통합특별시의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과감하게 끌어들이야 한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민주권의 실현은 주민자치에서 부터

참여해 도출한 의사결정이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부가 움직이는 상향식 자치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행정 권력과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결함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가정 '시민주권 위원회'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원회 산하에 현장의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해 직접 대안을 논의하는 민주적 대의 구조로서 강력한 '주민자치특별위원회'를 두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철학적·구조적 대전환을 안착시키기 위한 세가지 실질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남광주 주민자치 기본조례'의 전면적인 제정이다. 현재 각 시·군·구별로 파편화되고 이원화된 조례 체계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이고 강력한 자치 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기구인 주민자치회에 공공시설 위탁 운영권, 마을 축제 기획·집행권, 기초 행정 사무 사전 심의권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해 줄 때 주민자치회는 비로소 행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법적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둘째는 합의제 행정기관 내 주민자치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의 전면 혁신이다. 합의제 행정기관 내 주민자치특별위원회는 관료들의 지침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메가시티 차원의 주민자치 예산 배정 기준을 스스로 심의하고 자치 정책의 방향성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이 기획하고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가 집행하는 구조로 행정 메커니즘을 바꿀 때, 주민들은 시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다. 셋째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하부 구조로서 '시민회의'의 구성과 생활 밀착형 숙의 토론 구조의 제도화다. 자치가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일상 공간인 마을과 골목길 단위에서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이 길러져야 한다. 모든 읍·면·동에 개방형 시민회의를 구성해 주자, 쓰러기, 안전 등 골목길의 생생한 의제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거쳐 통합특별시의 정책과 예산으로 피드백되는 촘촘한 연결망을 완성해야 한다.

시민주권이라는 가치는 주민들이 골목길에 모여 앉아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보는 주민자치의 매일매일이 쌓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값진 보상이다.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의 싹뿌리들에서 나오듯,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진짜 동력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읍·면·동의 골목길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기본조례의 전면 제정과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골목길 시민회의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구체적인 자치 실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광주의 위대한 완성은 바로 그 골목길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도박이 어두운 골목길이나 특정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도박은 아이들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 안에서 불법 게임의 탈을 쓰고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우리 아이는 착해서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도박은 호기심 많고 또래 문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쉽게 도박인지 인식도 하기 전에 전염된

스마트폰 속 숨은 뒷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해야

다. 바카라, 달팽이 레이싱 등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는 불법 도박들은 아이들을 순식간에 중독의 늪으로 빠뜨린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친구들과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고리의 사채를 쓰며 심지어 중고 거래 사거나 마약 배달 같은 심각한 범죄까지 손을 뻗게 된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나 평소애 쓰지 않던 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읍·출금 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 역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네 스마트폰 속은 안전하니?" 우리 아이와 24시간 밀착돼 있는 핸드폰 속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길이 아이를 범죄의 늪에서 구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윤수경·창흥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숨어사는 사람들」 - 피재현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디 멀리간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서 살고 있다

허리 병을 고쳐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갑자기 가 버리셔서 그러지 못했다
- 출처 : '불투명 인간', 걷는사람, 2026.

내가 들기로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림자도 없이 투명해지고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생전에 궁금했던 어떤 시점에 가 보기도 하고
자근거리에서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기도 하면서
자넨다고 한다

*조심조심 사는 이유는 멀리 가지 않고 투명하게 숨어서 사는 다른 생이 길게 남은 걸 알게 되어서인데, 함부로 내두른 것과 다음 생까지 끌고 간 걱정거리가 어쩔 수 없이 얽혀 불투명하게 비친다면 짝하고 아픈 일

어제,
몸살이 나서 창가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가
역광으로 비치는 아버지의 실루엣을 보았다
투명 인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투명 인간이어서
원손을 허리춤에 엮고 걷는 모습이
영락없이 아버지였다

역광이 비칠 때 눈이 부신 것은 다음 생을 사는 존재들이 파고들어서인데, 이생에서 가장 아팠던 것들이 가장 깊이 파고든다. 역광은 오래 견딜 수 없고 빛 건너 무엇이 있는지 살필 거를도 없이 눈물을 자아내기도 한다. 아무리 조심하며 살다 건너가도 피하기 어렵다.
<천세천 시인·비평가/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FAX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광고국 650-201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편집국 650-201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